

▶ 매일 INDEX



6면

쌀의 날… 쌀 과잉 재고 해소 '앞장'

2022년 8월 19일 금요일(음 7월 22일) 제3082호

전주매일

www.jjmaeil.com

비수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흥제로 2길 6번지

대표전화(063)288-9700

호우 피해지역 특별교부세 긴급 지원

전북도, 군산 2억7000만·익산 3000만원

이재민 구호 위한 응급복구비 용도로 활용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지난 12일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지원계정 심의 위원회 심의 결과, 전북도 및 11개 시·군이 2022~23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총 2,058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북도 광역분위 560억 및 도내 11개 시·군 인구감소지역 10개 시군 및 관심지역(익산)의 배분액 1,498억 원을 포함한 금액으로, 연도별로 보면, 올해에는 882억(도 240억, 시군 642

억), 내년에는 1,176억(도 320억, 시군 856억)이 배분되게 된다.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시·군은 기금 투자계획 평가를 통해 배분됐으며, 시·군별로는 무주·순창이 각 168억(올해 72억, 내년 96억), 8개 시·군(정읍·남원·김제·진안·장수·임실·고창·부안)은 각 140억(올해 60억, 내년 80억), 관심지역인 익산은 42억(올해 18억, 내년 24억)을 확보했다.

도는 시·군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를 위해 시·군별 인구여건 분석, 지방소멸 대응 전문가 특강, 평가 대응 시전 컨설팅 추진 등을 통해 시·군의 투자계획 수립 및 평가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했다.

이에 도 및 11개 모든 시·군이 평균 이상인 C등급 이상의 기금을 배분받는 성과를 이뤘다.

전북도 및 11개 시·군은 2022~23년 약 2,000억원 정도 기금을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투자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삶의 질 제고·지역활력 창출·체류인구 유입 등 3개 분야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주거·상하수

도 등 생활 인프라 개선,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 등 청년 일자리 창출·도농 상생 교류 확대, 워케이션 등 특색있는 콘텐츠 여행·체험을 추진할 계획이며, 배분된 기금은 8월 말 조합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지역이 직면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하는 국가지원의 안정적인 첫지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적극적인 대응으로 약 2,000억원의 기금을 확보한 만큼,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지방소멸 대응 모델도 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우리 쌀 '바로미'로 만든 빵이에요



10월 7일 'JB카드 콘서트'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오는 10월 7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야외공연장에서 제11회 JB카드 콘서트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2019년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공연을 이어 가지 못한 JB카드 콘서트가 올해 다시 고객들과 만난다.

에일리, 신승훈, 로시를 초청해 다채로운 무대는 물론 고객 참여 이벤트 등 다양한 볼거리로 선사할 예정이다.

JB카드 고객 중 오는 9월 14일까지 응모일 기준 카드포인트를 보유하면 전북은행 홈페이지와 JB뱅크 앱에서 최대 8장까지 응모할 수 있다. /뉴스스

쌀의 날을 맞이한 18일 원주군 농촌진흥청 국립식물원에서 관계자들이 국산 쌀 가루 전용 품종 '비로미'로 만든 빵 나눔 행사를 열고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지역 균형발전 '한마음 한 뜻으로'

정운천·한병도 의원,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각각 대표발의
관할구역 종전과 동일… 법이 정하는 범위서 특수한 지위 규정



"전북특별자치도법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국민의힘 정운천의원(비례대표)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의원(의산시을)은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과 한 의원은 "수도권 일 극체제는 인구 솔림 현상 심화, 지방소멸 위기 가속화 등으로 균형발전을 크게 저해하고 있으며, 전북은 대규모 국책사업인 새만금, 탄소산업, 농생명 등 특화된 지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원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제정안은 전북의 지역적·경제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된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국토 균형발전과 전북 경제·생활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운천 의원과 한병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은 전북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은 종전의 전라북도의 관할구역과 같으며, 이 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특수한 지위를 규정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사진 왼쪽)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18일 국

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특별자

치도 특별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또한 위원장은 국무총리,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밀도록 하며,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관할 시장·군수 등을 비롯한 당연직 위원과 민간 위촉위원 등을 포함해 3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다.

이율러 재정측면의 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내 별도의 계정 설치와 전북자치도 발전 기금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명문화 했다.

이밖에도 제정안에는 주민투표 요구 건을 완화하는 특례, 행정기구의 설치와 자방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는 조직 특례, 지역인재의 선발채용에 관한 규정과 감시위원회 설치 및 자치감사계획 수립 등

의 내용도 담았다.

정 의원과 한 의원은 "조광역 협력과 특별자치도 등 정부의 주요 균형발전 정책에서 소외된 전북은 오랜시간 낙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행안위 법안소위의 빠른 인건 상정, 속도감 있는 상임위·본회의 의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며, 도민의 염원을 담아 특별법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의 종장 기적 발전방안과 행·재정적 자주권 제고, 행정규제 완화 등의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

/김경수 기자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또한 위원장은 국무총리,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밀도록 하며,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관할 시장·군수 등을 비롯한 당연직 위원과 민간 위촉위원 등을 포함해 3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다.

이율러 재정측면의 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내 별도의 계정 설치와 전북자치도 발전 기금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명문화 했다.

이밖에도 제정안에는 주민투표 요구 건을 완화하는 특례, 행정기구의 설치와 자방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는 조직 특례, 지역인재의 선발채용에 관한 규정과 감시위원회 설치 및 자치감사계획 수립 등

의 내용도 담았다.

정 의원과 한 의원은 "조광역 협력과 특별자치도 등 정부의 주요 균형발전 정책에서 소외된 전북은 오랜시간 낙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행안위 법안소위의 빠른 인건 상정, 속도감 있는 상임위·본회의 의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며, 도민의 염원을 담아 특별법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의 종장 기적 발전방안과 행·재정적 자주권 제고, 행정규제 완화 등의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

/김경수 기자

과에 연계해 경영효율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평가결과가 부진한 기관에 대한 컨설팅 및 경영개선계획 수립 등 후속 조치도 이어질 전망이다.

전북도는 부진기관을 대상으로 경영 컨설팅을 실시한 후 연말에 경영개선 계획을 수립·보고하도록 하는 등 지속적으로 경영개선을 유도하고, 경영 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별 임직원 성과급 및 기관장 연봉과 연계해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도는 내년도 평가에 대비해 평가지표를 개선한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체계 도입을 위해 기관장 면담평가 항목에 관련 지표를 추가한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재난·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세부지표도 신설한다. 또한, 기관의 장애인 채용비율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 고용률 목표치를 기존 3.4%에서 3.6%로 상향한다.

/김경수 기자

과에 연계해 경영효율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평가결과가 부진한 기관에 대한 컨설팅 및 경영개선계획 수립 등 후속 조치도 이어질 전망이다.

전북도는 부진기관을 대상으로 경영 컨설팅을 실시한 후 연말에 경영개선 계획을 수립·보고하도록 하는 등 지속적으로 경영개선을 유도하고, 경영 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별 임직원 성과급 및 기관장 연봉과 연계해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도는 내년도 평가에 대비해 평가지표를 개선한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체계

도입을 위해 기관장 면담평가 항목에 관련 지표를 추가한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재난·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세부지

표도 신설한다. 또한, 기관의 장애인 채용비율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 고용률 목표치를 기존 3.4%에서 3.6%로 상향한다.

또한 도는 내년도 평가에 대비해 평가지표를 개선한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체계

도입을 위해 기관장 면담평가 항목에 관련 지표를 추가한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재난·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세부지

표도 신설한다. 또한, 기관의 장애인 채용비율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 고용률 목표치를 기존 3.4%에서 3.6%로 상향한다.

또한 도는 내년도 평가에 대비해 평가지표를 개선한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체계

도입을 위해 기관장 면담평가 항목에 관련 지표를 추가한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재난·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세부지

표도 신설한다. 또한, 기관의 장애인 채용비율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 고용률 목표치를 기존 3.4%에서 3.6%로 상향한다.

또한 도는 내년도 평가에 대비해 평가지표를 개선한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체계

도입을 위해 기관장 면담평가 항목에 관련 지표를 추가한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재난·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세부지

표도 신설한다. 또한, 기관의 장애인 채용비율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 고용률 목표치를 기존 3.4%에서 3.6%로 상향한다.

또한 도는 내년도 평가에 대비해 평가지표를 개선한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체계

도입을 위해 기관장 면담평가 항목에 관련 지표를 추가한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재난·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세부지

표도 신설한다. 또한, 기관의 장애인 채용비율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 고용률 목표치를 기존 3.4%에서 3.6%로 상향한다.

또한 도는 내년도 평가에 대비해 평가지표를 개선한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체계

도입을 위해 기관장 면담평가 항목에 관련 지표를 추가한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재난·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세부지

표도 신설한다. 또한, 기관의 장애인 채용비율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 고용률 목표치를 기존 3.4%에서 3.6%로 상향한다.

또한 도는 내년도 평가에 대비해 평가지표를 개선한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체계

도입을 위해 기관장 면담평가 항목에 관련 지표를 추가한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재난·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세부지

표도 신설한다. 또한, 기관의 장애인 채용비율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 고용률 목표치를 기존 3.4%에서 3.6%로 상향한다.

또한 도는 내년도 평가에 대비해 평가지표를 개선한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체계

도입을 위해 기관장 면담평가 항목에 관련 지표를 추가한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재난·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세부지

표도 신설한다. 또한, 기관의 장애인 채용비율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 고용률 목표치를 기존 3.4%에서 3.6%로 상향한다.